

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적경제

제73호 2012. 11. 21

- 작성 : 최석현 / 창조경제연구부 연구위원
(gree1200@gri.kr, 031-250-3552)
김군수 / 창조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이재광 / 기획조정실 선임연구위원

목 차

쟁점과 대안

- I. 왜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인가?
- II. 외국의 사회적경제 발전사례
- III. 한국 사회적경제의 바람직한 방향
- IV. 시사점

- 「이슈 & 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슈 & 진단」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공동사회의 사람들은 모든 분열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반면, 이익사회의 사람들은 여러 통합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 Tönnies, Ferdinand (1883) -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쟁점과 대안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기업의 괄목한 만한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성장의 온기는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로 쉽사리 확산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공동체성이 약한 경제는 경제위기 대응력이 약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미래를 위한 의욕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자생력을 키우는데 실패한 사회적기업과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협동조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위기는 사회적경제의 출발점이자 전환점이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1970년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조합원 위주의 경제공동체에서 벗어나 국가를 대신해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광범위한 사회적경제 주체로 변신하였다. 캐나다 퀘벡은 1990년대 지역경제위기로 고실업, 지역공동화,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로 인한 사회 서비스 제공 어려움에 직면하여 연대협동조합을 탄생시켰다. 사회적경제는 또한 경제위기시기 지역경제의 방파제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한 비중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위기에 강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1) 사회적경제의 근간인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성, 학연, 지연의 차별문화를 바꿔나가야 하고, 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야 하며, 3)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편과 법적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지역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경영관리 등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한다.

I. 왜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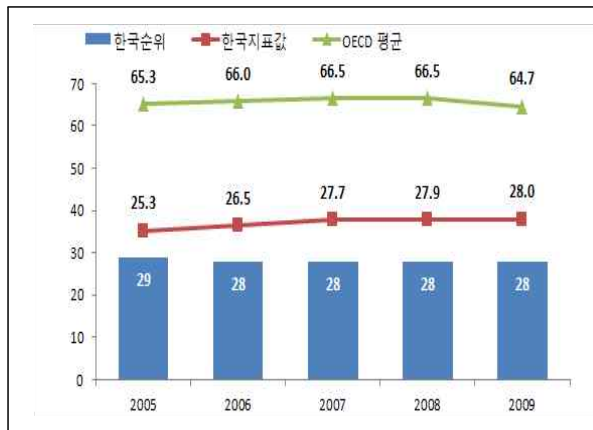
양극화 심화로 복지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재정의 급속한 확충이 필요하나 현실적인 한계로 시민사회 부문의 기여 확대가 요구됨

○ 우리나라의 정부재정 중에서 보건·사회·문화 분야 지출비중은 28.0%로 OECD 평균인 64.7%보다 상당히 낮고 34개국 중에서 28번째로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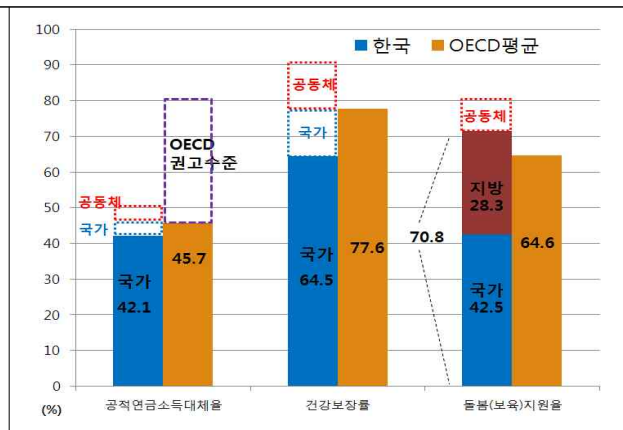
- 현재 저부담 저복지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복지자원 이용과 국가의 재정증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보건·사회·문화분야 지출비중>



주 : 막대그래프 안의 수치는 OECD 34개국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순위를 나타냄.
 자료 : 기획재정부(2011).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

<향후 복지자원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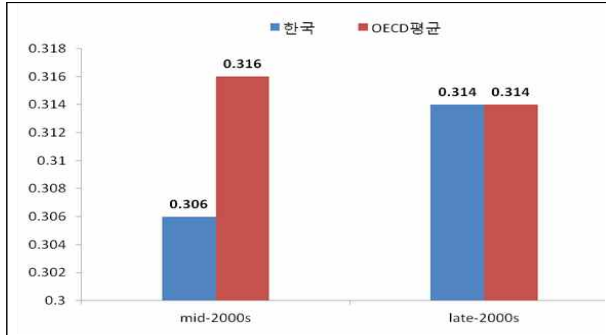
자료 : 김용하 외(2011). 『OECD 국가의 복지 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희연 외(2012). 『한국적 복지모델 구축 방향』, 이슈&진단 제50호, 경기개발연구원.

□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 빈곤률이 높은 수준이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도 상당히 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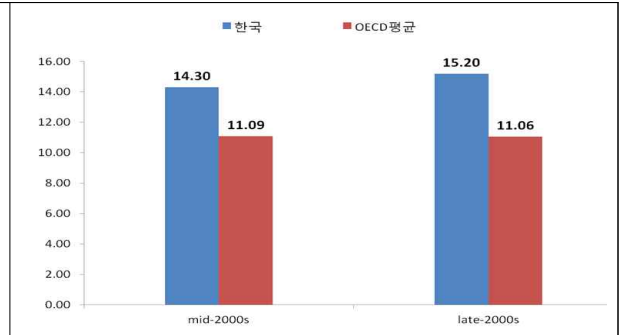
○ 소득의 불평등 수준인 지니계수는 2000년 중반 0.306에서 2009년 0.314로 증가하고 빈곤률은 2000년 중반 14.3%에서 2009년 15.2%로 증가

- 지니계수로 본 우리나라 불평등수준은 OECD 23개국 중 11번째로 높고, 빈곤률은 34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

<지니계수>



<빈곤률>



주 : 1) 지니계수는 계수값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
 2) 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비율.

자료 :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

-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고용의 질도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편

- 대중소기업의 효율성 격차 수준은 2011년 기준으로 -2.21로 비교대상 국가 56개국 중에서 51번째로 열위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0년 기준 19.2%로 OECD 평균인 12.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대중소기업 효율성격차>



<비정규직 비율>



주 : 기업간 효율성 격차는 중소기업의 효율성에서 대기업의 효율성을 뺀 값.
 자료 : 권선운(2011). 『한국의 기업효율성 현황과 시사점 :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소기업포커스, 제12호, 중소기업연구원 ; OECD(각 년도).

사회적경제는 무한경쟁에서 따뜻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

□ 따뜻한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약자에 대한 부작용을 국가 주도의 규제 강화가 아닌 협동과 우애를 통해 보완하는 데에서 출발

○ “자본주의 4.0”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을 협동과 우애의 따뜻한 경제로 보완하는 데 목표를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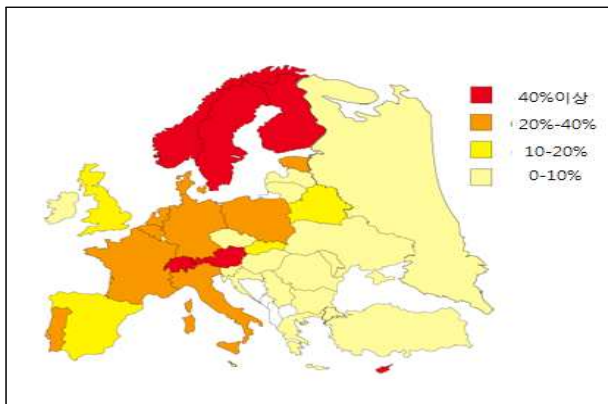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유래>

OECD(1999)는 “사회적경제란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권한 보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을 강조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경제는 프랑스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Charles Gide)가 사회적경제의 세 가지 범주로 기업(기업의 사회적공헌), 결사체(노동조합,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공공규제(사회적입법 등) 등을 언급하여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에 사회적경제관을 설치하면서 알려졌다. 이어서 1970년대 프랑스에서 상호공제조합, 유사성격의 민간단체를 총괄할 개념으로 1977년 “사회적경제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제안되어 1980년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헌장”에서 이 개념이 공식화되었다.

○ 유럽에서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와 더불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빈곤과 실업문제를 국가와 시민이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에서 사회적경제가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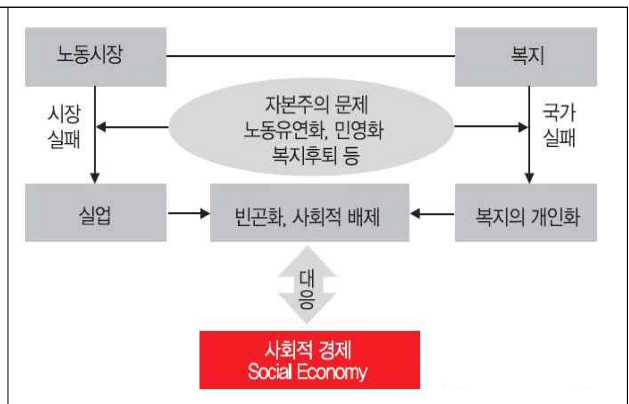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는 경제위기시 오히려 강해지고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

<유럽 인구 대비 협동조합 조합원수 비중>



자료 : Cooperatives Europe(2010). “2009 European Cooperatives Key Statistics”.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



자료 :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집.

<금융위기에 강한 영국 사회적기업>

1. **영국 사회적기업은 경제위기 종결자** : 2009년 영국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56%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영국 중소기업의 약 28%만이 매출이 증가했고, 약 43%가 매출이 증가했다는 결과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2. **영국 사회적기업은 긍정론자**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매출향상을 기대하는 사회적기업은 전체의 48%로 일반 중소기업(24%)보다 두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영국 사회적기업은 클수록 강해진다** : 조사에 따르면 영국 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만 파운드를 넘어서면 더욱 빠른 속도로 이윤을 증가시키며, 정부의존에서 빠르게 탈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The Social Enterprise Coalition(2009). "State of Social Enterprise Survey".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

1. **협동조합** : 공동소유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욕구와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
2. **사회적협동조합** :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모태
3. **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추구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인 반면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추구함
4.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방식으로 해결하는 활동 또는 사업
5. **마을기업** : 지역공동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기업
6. **농어촌공동체기업** :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농어촌공동회사를 조직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 영역 중 농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
7. **사회벤처** :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거둔 수익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취적 사회적기업
8. **사회적 회사(Social Firm)** : 사회적기업의 또다른 형태인 Social Firm 은 장애나 기타 이유로 고용조건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고용에 초점을 맞춰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

II. 외국의 사회적경제 발전사례

낙후지역의 발전을 협동조합이 이끈다 : 이탈리아

□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낙후지역에서 사회적일자리 창출로 지역 복지 뿐만 아니라 일자리 공급자로 자리매김

○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역사적인 배경은 지역분권적인 경제공동체로 출발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 이탈리아 사회복지체계의 특징은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 체계의 저발전과 지방정부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구조

- 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는 재정여력이 떨어지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능력을 약화시켜 기존 협동조합이 전면으로 나서게 됨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운동의 기원 : 트리에스테>

지역 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 계기는 1970년대 후반 트리에스테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베니스 북부에 위치한 트리에스테에서는 정신과 의사 프랑코 바자리아(Franco Basaglia)가 앞장서서 정신장애자의 격리 입원에 반대하는 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지게 되었다. 운동의 결과, 1978년 법제정을 계기로 정신병원이 차례로 폐쇄되었는데, 이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때 협동조합이 나서 정신장애 및 약물의존증 환자, 이민자, 장기실업자, 노숙자, 출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등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운동은 영국으로 건너가 사회적회사(Social firm), 즉 취약계층 고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모태가 되었다.



자료 : Franco Basaglia 홈페이지(<http://www.francobasagl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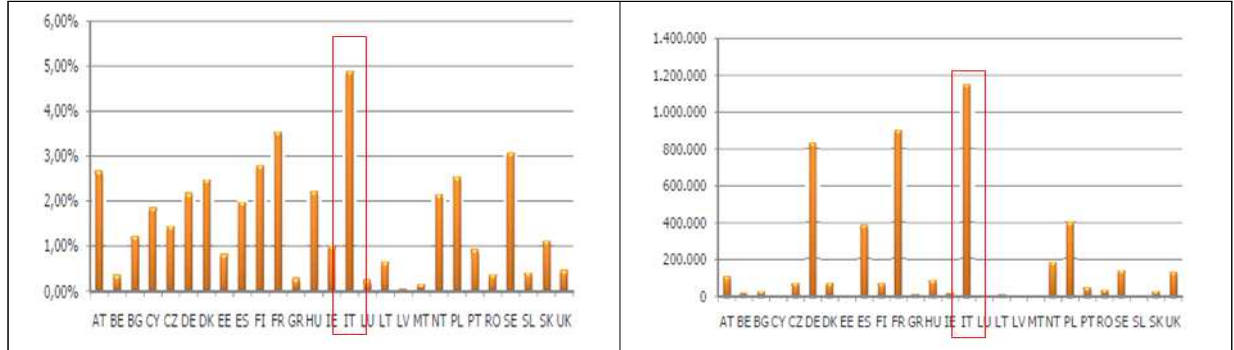
○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협동조합운동 활성화는 지역사회 일자리 증가로 이어짐

- 1951년 협동조합의 평균 종사자수는 12.8명으로 일반 기업 24.6명의 절반 수준이나, 2006년에는 협동조합의 평균 근로자수가 20.7명으로 일반기업 7.7명보다 2.7배 많음

- 2009년 현재 협동조합이 고용된 근로자수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수준에 육박

<경제활동인구대비 협동조합 고용비중>

<이탈리아 협동조합 고용자수>



자료 : Cooperatives Europe(2010). "2009 European Cooperatives Key Statistics".

□ 협동조합간의 연대를 통한 금융, 교육, 훈련, 재정관리 등의 노하우를 상호교환하고 신생 협동조합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19세기부터 전국적인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지원을 위한 금융 및 경영지원시스템을 잘 갖춰왔음

- 협동조합운동을 위한 전국금융회사(FINEC)는 1987년부터 협동조합의 벤처캐피탈 제공, 장기투자 제공, 금융서비스 제공, 초기 운전자금을 제공해 주는 역할
- 각 협동조합 연합단체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 훈련, 기술, 회계, 재정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경제 생태계 :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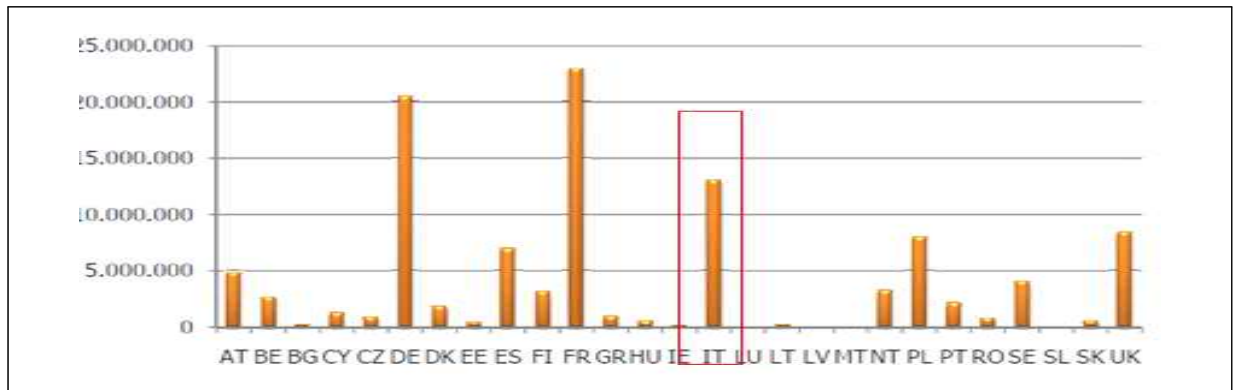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못 살았던 인구 430만명의 에밀리아로마냐는 2008년 기준 1인당 소득 4만유로(약 6000만원), 실업률 3.1%로 유럽에서도 부유하고 실업률이 낮은 지역으로 변모했다. 에밀리아로마냐주 총생산의 30%는 8000개의 협동조합 기업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州都인 볼로냐지역은 총생산의 45%를 협동조합에서 창출하고 있다. 특히 “코프아드리아티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00만명이 넘고 매출액이 20억유로(2008년 기준)로 제품의 70% 이상이 볼로냐지역에서 생산됨으로써 볼로냐에서 소비한 돈이 볼로냐로 재투자되는 등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료 : “8천개 협동조합 유기적 협력...해고사태 없이 금융위기 극복”, 한겨레신문(2011.7.3) ; “함께 짓고, 함께 살아가는 주택조합 무리”, 관악사회복지 블로그(2011.12.3).

- 사회서비스 대상자, 사회서비스 근로자로 조합가입 범위를 넓힌 사회적협동조합 발전은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의 확장으로 이어짐
 - 이탈리아정부는 기존의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규정 때문에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제공확대에 어려움을 겪자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 법을 도입
 - 기존 협동조합 지위에서는 생산 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협동조합원 이외에 이에게 제공할 수 없었는데 법 개정을 통하여 이를 허용
 - 회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유급근로자, 자원봉사자, 서비스 수혜자, 후원자, 공공부문 등 다양한 이들이 조합에 참여 가능

<이탈리아 협동조합 조합원 규모>



자료 : Cooperatives Europe(2010). "2009 European Cooperatives Key Statistics".

사회적경제내 상생을 견인 : 퀘백의 대형협동조합과 연대협동조합

- 이민자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성장한 협동조합이 퀘백 지역경제를 이끄는 대형 경제주체로 성장
- 퀘백의 협동조합운동은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 운동인 영국의 로치데일 (Rochdale) 조합이 설립된 지 불과 17년 후인 1861년에 시작
 - 캐나다는 프랑스의 세배정도의 면적으로 인해 이민자 정착지간의 거리가 멀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내의 생산, 소비, 교육, 문화 등을 공유

-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지배권이 넘어간 이후 캐나다 내 영국계 자본에 대항하는 프랑스계 지역자본으로서 협동조합은 퀘벡 지역경제를 이끄는 대형 경제주체로 성장

<퀘벡의 두 대형 협동조합>

<p>1900년 데자르댕은 퀘벡의 레비(Levis)지역에서 유럽의 신용조합 모델을 받아들여 ‘인민 금고 운동’을 시작했다. 고리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난한 농민들의 소규모의 기여로 협동조합 방식의 ‘인민 금고 운동’은 퀘벡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며, 북미에서 가장 큰 신용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2010년 현재 총자산이 원화 기준으로 약 216조에 이른다. 보험, 투자, 컨설팅 등 영역에서 20개 자 회사를 두고 422개 지점을 두고 있다. 조합원수가 580만 명이고, 직원수는 4만 7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	<p>퀘벡의 농업협동조합연맹인 라쿠페데레는 1922년 9월 당시 퀘벡주 인구의 2/3가량이 농업종사였던 시절 기존의 퀘벡 치즈협동조합 등의 3개 협동조합이 통합되면서 출범했다. 퀘벡주의 농식품업계 1위이고, 고용규모만 1만6천여명으로 퀘벡주에서 기업규모로 5위의 기업이다. 매출이 5조원대로, 자회사 네트워크 까지 합하면 7조원대에 이른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체인 ‘소닉’이 또한 퀘벡 최대 규모이다.</p>
 <p>데자르댕(Desjardins) 본사전경</p>	 <p>라쿠페데레 마크</p>

자료 : “연대가 빛은 성장...경제위기도 못말린 성공스토리”, 한겨레(2012.8.24).

라쿠페데레 홈페이지(<http://www.90.lacoop.coop/>).

<한국 신용협동조합의 또다른 기원 : 캐나다 안티고니쉬 운동(The Antigonish Movement)>

<p>안티고니쉬 운동은 캐나다 동북부인 Nova Scotia 지방의 한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지역협동조합운동이다. 19세기 후반 이 지역은 경제적인 빈곤으로 주민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갔고, 지역사회는 낙후되어 갔다. 이에 세인트 프란시스 세비아 대학(St. Francis Xavier University)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동조합을 일으켰는데, 이 대학의 탐킨스(James Tompkins) 박사는 교육을 통해 청년 협동조합운동가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켰고, 지역금융, 교육, 생산을 동시에 하는 협동조합을 탄생시켰다. 1960년 부산에서 '성가신용협동조합'을 결성한 메리가별 수녀(Sister Mary Gabriella Mullherin)와 같은 해 6월 서울에서 '가톨릭중앙신협'을 창립한 장대익 신부 등 두 분이 1957년 이 지역의 협동조합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에서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p>	
---	--

자료 : 김창진(2012.4.2). “협동조합의 나라, 캐나다”, 환경정의홈페이지 ; 안티고니쉬운동 기념 다큐멘터리 영화포스터.

□ 대형 협동조합이 중소 협동조합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여 상생의 모델을 제공

○ 1990년대 퀘벡 주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대형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계기를 마련

- 퀘벡주는 고령화와 기업의 타지역 이전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재정압박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1993년 실질 실업률 22.3%, 사회복지 수혜자는 총 인구의 10%에 육박
- 1996년 주정부 주도로 지역기업, 협동조합, 사회단체들의 연석회의인 ‘Summit on the Economic and Social Future of Quebec’이 개최 되어 연대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경제 모델에 합의
- 대형협동조합과 노총은 사회적 연대기금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 기금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대협동조합이 만들어짐

<연대 협동조합>

1996년 경제위기 극복과 고령화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조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기존의 협동조합 모델, 즉 조합원 위주의 협동조합 조직으로는 조합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일반 사회복지대상에게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 노동자들이 주 대상인 노동자협동조합, 조합 소비자가 주 대상인 소비자협동조합과 성격이 다른 조직형태인 연대협동조합이 제안되어 1997년 법제화 되었다. 연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와 조합비를 내는 노동자 혹은 후원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포괄할 수 있으며, 조합의 활동은 공동체에 이익에 부합되는 활동으로 폭넓게 정의되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불리기도 한다.

- 연대협동조합은 퀘벡의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일자리 제공자 역할을 담당
 - 도입 이후 매년 100여개의 연대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고, 2007년 현재 약 1,700여개의 협동조합이 운영
 - 2005년 매출액은 미화 9,100만 달러이며 6,000명의 일자리와 연간 550만 시간의 서비스 제공

<설립연도별 연대협동조합 현황>

설립연도	신규설립 협동조합수	신규설립 연대협동조합	
		조합수	비율(%)
1997년	127	23	18.1
1998년	189	32	16.9
1999년	185	45	24.3
2000년	169	46	27.2
2001년	142	31	21.8
2002년	169	36	21.3
2003년	220	51	23.2
2004년	115	33	28.7
2005년	131	42	32.1
2006년	157	81	61.6
2007년	98	59	55.1

자료 : MDEIE(2007). “Direction des cooperatives”.

복지국가의 빈자리를 사회적기업이 채운다 : 영국

□ 영국 사회적기업은 비즈니스 성공을 통한 이윤의 지역복지자원화에 기업 운영의 초점을 둠

○ 7,500여개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영국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기원은 19세기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과 우애조합 (Friendly society) 운동으로부터 시작

- 산업자본주의 전성기였던 18-19세기 도시근로자의 빈곤문제 해결과 빈곤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작된 민간차원의 운동은 현재의 영국 사회적경제의 특징
- 영국 사회적경제의 공식명칭은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VCS)로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조직이 중심이 된 지역재생을 의미

<인보관 운동>

<우애조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적 배경 : 18세기부터 진행된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영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였으나, 외국의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파멸, 급격한 대도시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 열악한 근로환경, 식민지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동련던 지역의 빈민굴화 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 운동의 주체 : 1867년 에디워드 데니슨(Edward Denison) 목사가 런던의 한 빈민지역에서 교육과 상담을 시작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이 빈민지역에 거주 하면서 활동을 확대하였다. • 운동의 내용 : 인보관 활동가들은 공립학교에서 탁아사업, 급식, 심신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 했으며, 지역마다 공원을 조성하고 주택법규를 개선 하고 도시 계획을 통해 밀집주거지역 현상을 해소 하고 공립학교를 지역사회센터로 활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지역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17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는 공장 근로자수의 많아지기 시작하자 도시로 공급되는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였다. • 조합의 주체 : 근로자들은 생필품 품귀현상을 해결 하고자 스스로 노동자조합을 결성하여 상점과 고용주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후 조합원의 조합비 각출을 통한 조합 상점과 유통망을 스스로 구축·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 운동의 내용 : 우애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로치데일(Rochdale) 협동조합이다. 이들은 2펜스씩 각출하여 협동조합 기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제분 협동조합을 세워 직접적인 생필품을 생산·공급 하였다. 또한 소비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소비를 하도록 하였다.
--	---

자료 :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집.

-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고용규모는 작은 반면, 매출액은 높은 구조를 보임
 - 현재 고용인원이 2-4명 사이가 전체의 26%로 가장 높고, 20-25명 사이가 11%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매출액이 10만-25만 파운드인 사회적기업이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25만-백만 파운드인 사회적기업이 19%를 차지

<영국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

종사자수(명)	현재	향후고용계획
없음	20%	14%
1	14%	9%
2~4	26%	22%
5~9	11%	18%
10~25	5%	14%
26~49	5%	5%
50~99	4%	4%
100이상	8%	8%
알수없음	-	19%

<영국 사회적기업 매출액 분포>

매출액(파운드)	2009 조사	2011 조사
0-10,000	7%	6%
10,001-50,000	15%	13%
50,001-100,000	14%	14%
100,001-250,000	20%	20%
250,001-1,000,000	21%	19%
1,000,001-5,000,000	12%	12%
5,000,000이상	5%	8%

자료 : Social Enterprise UK(2011). "Fightback Britain".

<환경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동시에: Brighton 지역의 사회벤처 사례>



NCWRP의 전신은 영국 남부해안지역의 브라이튼시의 The Brighton and Hove Wood Recycling Project이다 이 환경 사회적기업은 영국에서 목재 생산을 위한 산림벌목을 줄이기 위한 목재 재활용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한 창업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NCWRP은 지역 관공서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공사현장에서 폐목재를 수거하여 재활용공정을 거친 후 주문형 가구 공장에 재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NCWRP는 지역 취약계층 출신 근로자들을 주로 채용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공급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다. NCWRP의 목재재활용사업이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큰 성공을 거두자, 영국 내 다른 지역에 산재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 목재가공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요청하게 되어, 전국적인 체인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11년 현재 NCWRP에 속해있는 지역목재재활용 업체는 20개에 달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사업 초기의 사회적기업의 원칙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이 체인의 운영원칙은 개방성, 통합성, 포섭성으로 상호간의 신뢰에 바탕하여 이윤창출을 통한 지역사회경제 발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초기의 목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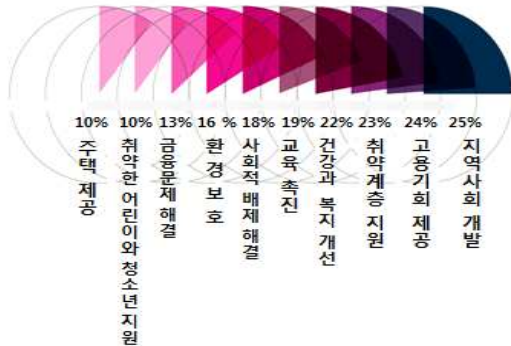
자료 : NCWRP 홈페이지(www.woodrecycling.org.uk/) ; Social Enterprise UK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g.uk). Ed Cox and Katie Schumuecker(2010). *Growing the Big Society*, IPPR.

□ 영국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형태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간접적 지원

○ 영국의 사회적기업 유형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증책임회사(59%), 자선업체 회사(37%)

- 영국 고유의 사회적기업 법인형태인 IPS(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 유형이 존재

<영국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표>



<영국 사회적기업 유형>

유형	2009년 조사	2011년 조사
보증책임회사	59%	54%
자선업체회사	37%	26%
IPS	12%	24%
주식회사	7%	12%
지역공동체 이익회사(CIC)	17%	10%
유한책임회사	2%	3%
기타	1%	7%
알수 없음	2%	2%

자료 : Social Enterprise UK(2011). "Fightback Britain".

○ 영국 사회적기업의 수입원은 정부 지원이외에 지원펀드 등 다양하게 분포

- 주 수입원으로 정부자금이 32%로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으나, 사회적기업 지원펀드(298%), 전문사회적기업 지원단체(16%) 등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음

- 초기에는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했으나 점차 수입원이 다변화

<영국 Littlehampton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사례>

Inspire Leisure는 지역정부로부터의 문화, 체육, 예술 시설 신탁운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이러한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재투자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이 사회적기업은 2002년 Littlehampton 지역내 지방정부들이 건립·운영하던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면서 시작되었다. 2011년 현재 Inspir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학교, 스포츠센터,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하며 한해 130만 명의 시설이용실적을 바탕으로 약 450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Inspire의 주수입원은 이용객들의 이용료이며, 일부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위탁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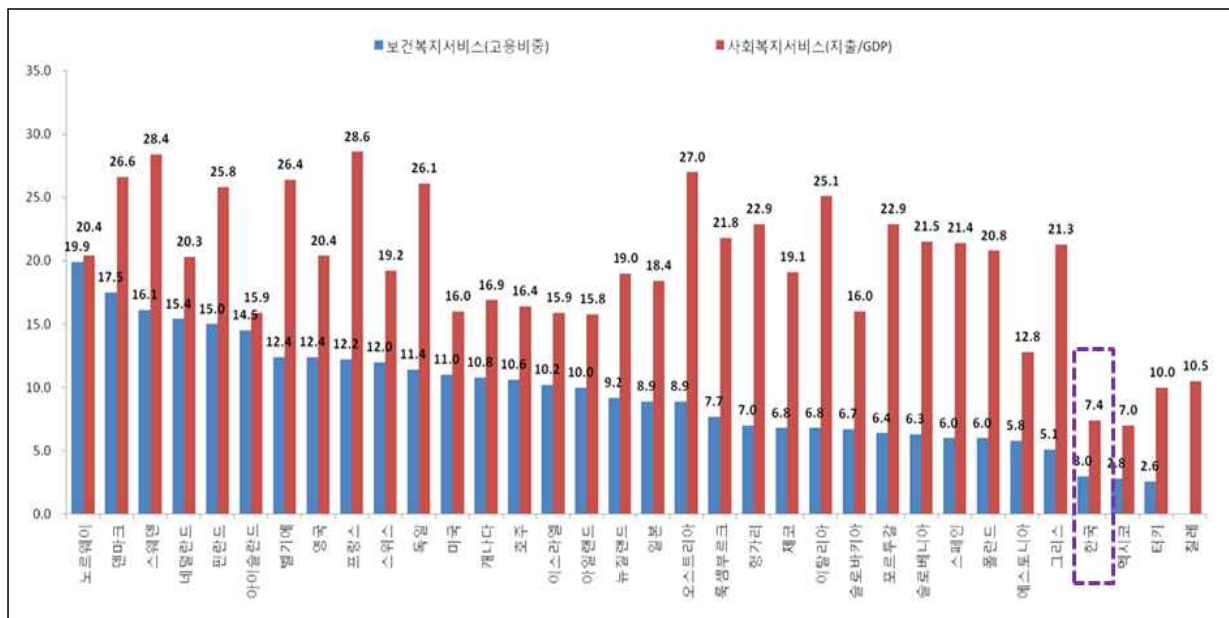
자료 : Social Enterprise UK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g.uk) ; Inspire Leisure 홈페이지(www.inspireleisure.co.uk).

Ⅲ. 한국 사회적경제의 바람직한 방향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급증하는 복지수요 충족

- 우리나라는 대표적 사회적경제 기반인 협동조합과 사회서비스업이 아직 매우 취약한 상태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사업체 중에서 협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은 2.0%로 상당히 저조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은 OECD에 비해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
 - 2011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고용비중은 7.4%로 OECD 34개국 중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생산비중도 3.0으로 최하위 수준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의 고용과 생산 비중>



자료 :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

□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형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주도의 공동체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계 구축 필요**

- 협동조합 기본법 안에 지원이나 인센티브 조항이 없어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력 상실이 우려됨으로 기본법 시행령 개정 필요
 - 금융과 보험분야의 진출 불허로 협동조합 전체의 자금 조달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정부와 민간의 주도로 협동조합 기금의 설립 필요
 - 외국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정부의 출자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상태로,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출자 허용 필요

□ **사회적경제 발전의 근간인 지역 사회자본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기반 확대**

- 우리나라는 소규모 공동체를 통한 상부상조의 전통이 강하고, 계·관혼상제 부조금 등 고유의 민간부문에서 복지자원 공유의 전통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지역내 지연·혈연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복지 자원의 공유범위를 확장
 - 지역복지의 실질적 공급자이자 수혜자인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 참여를 막는 가부장적·성차별적 문화 철폐

<지역 사회자본 참여는 여전히 성별·지연·학연에 따라 차별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줄’에 기대는 정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지만 아직도 동창회나 향우회 등 학연, 혈연, 지연 중심의 전통적인 차별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창회는 가입률이 50.4%로 가장 높고 종친회 22%, 향우회 16.8% 등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개방적 공동체인 국제구호, 인권단체가 2.3%, 소비자단체 2.5%, 사회봉사단체 3.9%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또한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에 대한 가입률은 남성이 여성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폐쇄적 공동체에 대한 여성참여를 가로 막는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 KDI(2006).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통합적 발전계획 수립

□ 사회적경제의 기반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생적 기반을 갖추는 혁신적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

○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도입된 이후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

- '10년말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사회적기업 근로자 비중은 0.05%, GDP 대비 사회적기업 매출액 비중은 0.03%

-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은 정체상태이며, 당기순이익이 하락하는 등 경영실적이 악화

<사회적기업의 경영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업당 평균 매출액(백만원)	911.1	686.7	817.6	766.7	806.4
기업당 평균 당기 순이익(백만원)	91.0	48.7	24.8	15.9	10.1

자료 : 고용노동부(2012). 『한국사회 혁신방향과 사회적경제 발전전망 심포지엄 자료집』.

○ 성장기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안정적 수익원 및 투자재원 확보

-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이 정부의 1년 단위 인건비 지원여부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니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를 오히려 양산

- 2012년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유급근로자의 약 52.7%가 비정규직이며 이는 한국 전체 비정규직 비율인 34.2%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고용·복지·지역균형 정책과 연계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필요

-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등 정부안에서 소관부처와 지원체계가 분산되어 중복지원과 지원정책 간 연결성이 미흡
 - 현재 중소기업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관련법률의 정비와 조율이 필요
 - 영국의 제3섹터청과 같이 독립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기관 설립 필요
-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사례와 같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연대협동조합, IPS와 같은 새로운 법인격 도입 필요¹⁾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조화시켜 법인설립, 수익배분, 조합원가입 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법인 도입 필요
 - 서구의 사회적협동조합, 연대협동조합 사례와 같이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을 한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나눔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기반 확대

- 학교 교육과정 강화와 관련 법제 개편을 통해 나눔 정신에 기반을 둔 기부문화 활성화
 - 어린 시절부터 자원봉사, 자선, 기부 등 “나눔”의 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강화
 - 기부가 일상화된 미국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원봉사, 자선바자회 등 ‘나눔’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도 이를 생활교육 차원에서 적극 강조

1) IPS(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는 영국정부가 2003년 영국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제정한 Cooperatives and Community Benefits Societies Acts 2003에서 도입한 새로운 사회적기업 법인체명이다. 이 법인은 영리법인의 영리활동 성격과 비영리기업의 이윤분배 성격을 조화시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달성이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세금 혜택과 관련, 순수 공익 목적의 기부를 권유하는 제도 개선 필요

- 미국의 경우, 1969년 개인 출연재단의 세제 혜택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부자가 개인의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막고 무조건적 기부를 활성화
- 또한 1986년 기부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세금공제를 대부분 철회하는 법안 통과 이후 공제 세금의 규모, 자신의 자산 규모, 기부금의 활용 등을 꼼꼼히 따지는 계획기부²⁾문화가 발전

<미국은 기부 규모가 농업생산의 2배에 달하는 '기부공화국'>

미국 부자들이 기부를 주도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의 기원은 19세기 대형 독점기업들로 인하여 미국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1835~1919)에서 시작되었다. 카네기는 19세기 말 석탄, 철광석 등 제철산업 기업을 대대적으로 인수, 철강트러스트를 구축하며 미국 철광의 25%를 생산해 독점 비난 받았으나 기부로 이미지 변신을 했다. 이어 1901년 카네기가 모건에 철강회사 매각 후 받은 대금 4억5000만 달러(2000년 기준 200억 달러) 중 3억5000만 달러를 생전에 기부함으로써 미국 거부들의 기부가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이 전통은 현대까지 면면히 이어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 등 많은 '기부왕'이 탄생했다. 세계 세 번째 부자로 꼽히는 버핏 회장은 2006년 재산의 85%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2012년까지 500억 달러(약 57조원)를 기부했으며, 게이츠 회장은 2000년 아내 멜린다 게이츠와 함께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 하였으며, 2008년 MS 회장직을 사퇴하고 자선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버핏 회장은 미국사회에서 기부문화 확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2010년 기준 미국의 총 기부액은 2,910억 달러로 미국 GDP 약 15조 달러의 2% 수준이며 이는 미국 내 농업 생산액 1500억 달러의 2배에 달하며, 개인기부액이 2910억 달러(77%)로 1위이며 재단(14.0%), 유산(14.0%), 기업(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기부금 규모 (2010년 기준)>
(단위 : 억달러)

구분	금액 (억달러)
개인	2,118
재단	410
유산	229
기업	153

자료 : “전 재산 50%기부 약속...빌 게이츠, 워런버핏 이후 저커버그도 동참 물결”, 조선일보(2011.6.26).

2) 계획기부(Planned Giving)란 기부를 계획하고 있는 고액자산가가 생애기간 동안 장기 계획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고액기부를 포함하여 유산기부, 부동산 기부 등이 여기에 속한다.

IV. 시사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협력적 지역 생태계 구축

□ 경기도내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과 광역단위 교육·컨설팅 등 종합지원체제 마련

○ 지방정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노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적 경제협의회를 구성하여 생태계조성을 위한 조례개정 등 정책협의 상시화

- 낙후지역 내 전통산업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나 협동조합의 육성 지원

- 박물관·향토문화관·지역문화축제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역문화를 이용한 지역취약계층 지원 : East Anglia 지역의 사회적기업 사례>



MEAL은 1984년에 영국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East Anglia에 지역에서 지역박물관을 관리하고 지역문화 축제 주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민간조직으로 시작했다. 영국 정부의 사회적기업 활성화정책이 시행되자, 2006년 이러한 순수 문화활동에서 MEAL은 사회적기업 형태로 변환되었다. MEAL은 우선 지역박물관 운영과 지역문화축제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박물관에 고용, 이들에게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중소기업과 다른 지역민간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자본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자료 : Social Enterprise UK(2011). "Fightback Britain" Museum of East Anglian Life 홈페이지(<http://eastanglianlife.org.uk/>).

지역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 대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간 상생 전략

□ 시장 선도자로서의 협동조합 육성과 더불어 지역밀착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중소협동조합 육성전략을 동시에 수립

- 경기도 차원의 협동조합의 광역화 지원과 지역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 브랜드화, 원료공동구입, 생산시설공유, 판로공동개척 등 지원
 -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판매네트워크와 마케팅 노하우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전수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또한, 대기업이 사회적경제조직에 교육시설, 시장정보제공 등 지원을 해줄 경우 경기도는 대기업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일본 대기업 74%가 사회적기업과 협력하여 사회공헌활동>

2008년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의 74%가 사회적기업과 협력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원형태는 제품을 기부하는게 60%였고, 40%는 이들과 직접협력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일본의 대표적 전자기업 NEC는 2002년부터 사회적기업과 협력하여 'NEC 사회적기업가 정신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7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이 35개 만들어졌다.

자료 : “일본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사회적기업과 협력이 대세”, 한겨레(2010.10.9).

□ 인력양성 및 공동 기술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경제와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여건 마련

<서울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의 주요 내용 (2012년 수립)>

「서울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에서는 인건비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하고, 행정 주도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혁신적 사회적기업 발굴, 둘째 성장기 사회적기업 지원, 셋째 체계적인 중간지원시스템 구축, 넷째 공공부문 소비 시장 확대, 다섯째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을 구축키로 하였다. 우선 사회적경제 조성의 기반이 될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단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청장년 사회적기업가 10개 팀을 오디션 식으로 선정해, 최대 3년간 창업지원금(3천만 원), 인큐베이팅센터 입주, 해외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 의 지원을 한다. 그리고 성장기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성장기 사회적기업에 기술혁신(R&D)사업공모를 실시해 상품 및 서비스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허브 기능을 수행할 중간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특수성을 보유한 특화사업을 발굴, 기초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도움으로써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사회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마을 공동체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 교육 실시, 경영컨설팅, 제도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종합지원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자료 : “서울시 시민주도의 ‘사회적경제체제’ 마련”, 서울시 온라인뉴스 서울톡톡(2012.4.5).

【 유럽과 한국 협동조합 현황 비교 】

국 가	기업수	회원수	고용자수
오스트리아	2,339	4,866,148	105,989
벨기에	166	2,670,000	13,547
불가리	1,273	179,309	26,386
사이프러스	620	1,275,993	5,067
체코	1,395	897,899	71,939
독일	7,415	20,509,973	830,258
덴마크	523	1,840,803	70,757
에스토니아	1,604	410,000	4,800
스페인	24,276	6,960,870	384,398
필란드	380	3,164,226	69,953
프랑스	21,000	23,000,000	900,000
그리스	6,392	942,991	12,538
헝가리	2,769	547,000	85,682
아일랜드	183	152,000	18,869
이탈리아	41,552	13,063,419	1,146,950
룩셈부르크	18	5,203	476
리투아니아	490	221,858	8,971
라트비아	74	17,330	440
몰타	58	5,663	250
네덜란드	677	3,249,000	184,053
폴란드	8,823	8,000,000	400,000
포르투갈	2,946	2,135,000	47,000
루마니아	1,577	809,170	34,313
스웨덴	9,170	4,069,852	140,520
슬로베니아	77	16,903	3,428
슬로바키아	383	570,845	26,334
영국	977	8,434,538	129,130
러시아	3,163	4,407,930	285,155
벨라루스	126	1,300,000	99,399
크로아티아	1,428	23,051	3,855
조지아	NA	NA	NA
몰도바	134	340,000	9,193
노르웨이	5,348	2,040,000	42,510
세르비아	1,403	176,069	6,500
스위스	1,416	3,426,151	84,104
터키	2,343	2,621,416	39,582
우크라이나	5,088	507,800	64,900
전체 EU 지역	157,606	122,858,410	5,357,246
한국	12,607	30,086	199,792

자료 : Cooperatives Europe(2010). "2009 European Cooperatives Key Statistics".
 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2). "협동조합 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